

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개최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.30(일) 14: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였다.

* 부총리(주재), 과기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중기부·국조실 장관, 기재부·국토부 1차관,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참석

※ 참고 :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귀범 (044-215-2710)
		담당자	사무관	조선형 (whwns56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민 (044-215-7130)
		담당자	서기관	정민철 (jmc71j@korea.kr)

-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
- 최근 산불로 약 4.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
 -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입니다.
- 한편,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,
 -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
 -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·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.
 - 민·관이 산불 피해 복구,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,
 -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,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-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,
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
10조원 규모의 “필수 추경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- 내용 측면에서는, 여야간 이견이 없는
 - ①재난·재해 대응과 ②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
 -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.
- 먼저,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
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.
-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
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
충분히 확보하고,
-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
산불 예방·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,
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.
-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
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,
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.
-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,
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
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.

-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
서민·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·고금리에 따른
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,
서민·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하여
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.
- 산불 피해 극복, 민생의 절박함과
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,
말씀드린 '필수 추경'은
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- 다만, 국회 심사과정에서
여야간 이견 사업이나,
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,
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,
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됩니다.
-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'동의'해 주신다면
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여,
추경안을 편성,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-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
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.